

조난 야생동물구난시스템 정비와 동거 야생동물자원의 보전¹⁾

최 병 진²⁾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우리나라의 현행 야생동물 구조의 시스템과 조직

최근 20여 년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하여 멸종위기종의 지정 및 관리, 멸종위기종의 국립공원 내 복원, 밀렵감시의 강화, 생물다양성협약 등으로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의 밀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개발이나 도심공원 내 번식 개체들은 도로의 개설에 의해서 서식처가 단절되 교통사를 당하거나, 부모가 교통사를 당한 어린개체들은 조난을 당하게 되며, 도로주변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이나 유리벽으로된 건축물에 비행하는 조류들이 충돌하여 구조를 받게 된다.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도심 내에는 말벌개체들이 증가하고 벌집이 건물이나 주택에서 발견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의 긴급구조구난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증가와 방송사에서 관련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여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여 구난 구조 신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해야 할 야생동물을 발견한 시민들이 신고할 대표번호가 없는 관계로 119 소방본부로 연락하거나 지자체의 환경관련기관으로 야생동물 구조신고를 하게 된다.

야생동물관련하여 조난과 구조를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버드119에서 국번없이 환경신문고(128)과 119를 통해서 야생동물의 구난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구조해야 할 야생동물을 발견한 일반시민들은 119로 동물의 조난을 신고하게 되면, 119 중앙본부에서는 조난동물의 발견 및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관할 119구조대로 연락하여 119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구조한 후에 동물보호단체에 동물을 인수인계하게 된다.

1)Organizing of Wildlife Rescue Systems and Conservation of Cohabiting Wildlife

2)CHOI, Byung Jin, Korea Natural Environmental Institute Co., Ltd., E-mail: batmanchoibj@gmail.com

그리하지 않고 부상당하거나 조난된 야생동물을 발견한 시민들이 지자체에 직접신고(환경관련부서)를 하게 되면 환경관련단체와 협약된 지역내 시민단체(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나 동물구조협회)등에서 출동하여 조난된 동물을 구조하여 자체 계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처치등을 취한 후 근처 동물병원 등에서 수술을 진행하거나 국가에서 조성한 권역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해 2004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현재 전국에 12개의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지정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밀렵이나 질병, 각종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치료를 위하여 설립하였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기능 이외에 조류독감(AI), 사스, 광견병 등 야생동물 질병조사·연구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12개의 구조센터는 전국 광역단체에 1곳정도 배정된 숫자로 각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모든 야생동물의 긴급구조에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장비에서 역부족이며, 사고 발생지역에서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송비등의 지원이 열악한 기초단체내 시민단체등에서는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인 계류장과 협약동물병원등을 통해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표 1. 야생동물 구조센터 지정현황 (14. 12. 31. 기준)

연번	위 치	운 영 기 관	개 소 일 자
1	경상북도	직영(경북산림소득개발원)	06. 5. 16.
2	강 원 도	위탁운영(강원대 수의과대)	06. 9. 27.
3	전라남도	위탁운영(순천시)	07. 4. 11.
4	울 산 시	직영(울산 대공원)	08. 4. 18.
5	경상남도	위탁운영(경상대 수의과대)	08. 5. 14.
6	부 산 시	직영(을숙도 에코센터)	08.10. 27.
7	경 기 도	직영(축산위생연구소)	09. 3. 24.
8	전라북도	위탁운영(전북대 수의과대)	09. 4. 30.
9	충청북도	위탁운영(충북대 수의과대)	09. 7. .
10	충청남도	위탁운영(공주대)	10. 9. 9.
11	제 주 도	위탁운영(제주대 수의과대)	10.11. 25
12	대 전 시	위탁운영(충남대 수의과대)	설치중

국민안전처 119 소방대의 열악한 환경과 동물구조의 어려움

2015년 9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소방차·구급차의 필수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인력 산정에서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 기준인력은 5만493명인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2만9783명으로 2만710명이 부족해 부족율이 전체 평균 41%에 달했으며, ‘인력부족율’은 세종시가 56.5%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54.7%), 충북(54.4%), 경남(52.5%), 충남(51.3%) 등도 기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강원(48.2%), 경기(47.2%), 전남(46.6%), 전북(44.4%), 창원(44%), 제주(43%) 등 인력부족율이 40%를 넘는 곳도 많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기준인력 5,078명에 비해 현장활동 인력이 4,655명에 그쳐 8.3%의 부족율을 나타냈다.

게다가 더욱 염려되는것은 인천, 부산, 전북지역은 2013년 말과 비교할 때 2014년 말 인력부족율이 13.2~15.2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 말 기준 인력부족율이 36.5%이었는데 1년 사이에 인력부족율이 4.5% 포인트 더 높아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이 발생하여 과로사하는 소방관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선 소방서의 예산은 부족으로 인하여 소방관들이 사비로 소방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는데 15년 9월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시·도 소방본부·소방학교 24곳 627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16명 중 229명(37.2%)이 ‘장갑, 랜턴,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비를 개인의 돈으로 구입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비로 장비를 구입한 횟수는 2~3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5건 이상 자비구매의 경우도 2명(3.1%)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근무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이 도심출현뎀대지나 야생화된 들개의 포획 등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별집제거를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의 진압과 구조 시 초기응급조치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며, 이들은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이수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포획, 야생화 된 개와 고양이의 포획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별집의 제거나 철새 등의 포획, 이동 등에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전공하거나 교육받은 사람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공무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구급 구조 전문조직의 구축의 필요성

현재와 같이 119소방본부와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지방환경청으로 이분화된 야생동물

의 구조구난, 벌집제거, 독사의 퇴치 등을 위한 독립되고 특화된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 법정협회인 (사)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나 등록단체인 (사)동물구조협회 조직을 강화하여 야생동물의 전담 조직을 지원 육성을 통해서 구난·구조된 야생동물의 현황 파악 및 긴급한 구조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작은 부상의 치료와 먹이 공급 후 재활, 동물의 포획 후 방사 등은 지역내 소규모 야생동물 보호소를 운영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조직은 국립생물자원관과 구조동물의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야생동물의 사고와 처리결과, 죽은 개체의 자연자원의 교육과 연구에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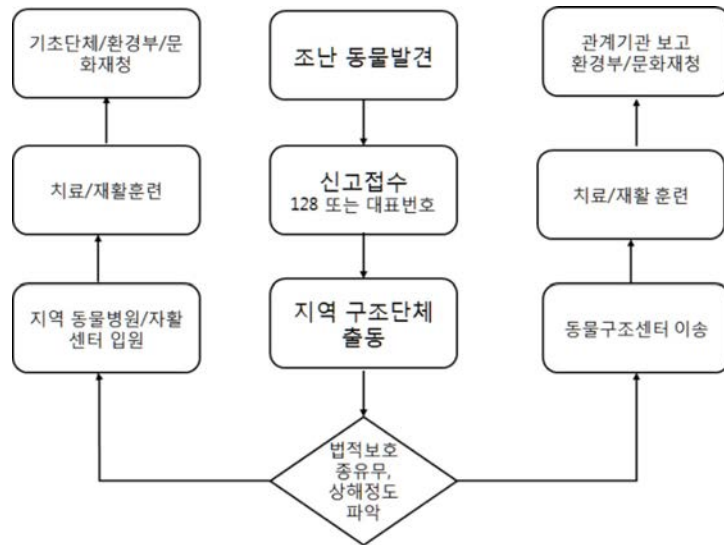


그림 1.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시스템

생물다양성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교통사, 충돌,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구난 등에 직접적인 출동을 하여 구조활동을 하는 이외에도 야생동물 구조단체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살고 있거나 침입한 야생동물 특히, 파충류(독사류), 조류, 곤충(벌집), 포유류(박쥐) 등의 구조 및 이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택이나 건물들에 동거하는 벌과 박쥐와 제비 생물종 중에서 거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이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입주민이 이주를 원할 경우 생태적인 방법으로 이주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독일의 박쥐친화 건축물 인증패

박쥐와 제비와 같은 일부 야생동물의 경우 종의 서식하는 환경이 주택이나 창고등과 유사하여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주택 등은 맹금류, 파충류와 같은 천적을 피할 수 있어서 인간의 보호를 받고자 인가에 둥지를 트는 것을 선호하는 생물종이다.

이러한 생물종들 중 제비는 도심 내 습지 곤충인 잠자리나 작은 양서, 파충류를 포식하여 개체수를 조절하며, 박쥐의 경우 대표적인 해충인 모기, 나방, 하루살이 등을 구제해준다.

이러한 인간 친화적인 동물의 보전을 통해서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으며, 도심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이주를 원할 경우 이들 개체를 안전하게 포획하여 주변의 우수한 서식지로 이주시켜 주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과 포획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서식지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족들이 박쥐, 조류와 동거를 원할 경우에는 서식지의 보전차원에서 이들 건물에는 가칭 “생물다양성 인증건물”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인증패와 함께 2회/년정도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건물의 오염등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나 도구를 제공해주며 학생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인정하여 봉사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